

May  
Polar Policy Net 2015

## Contents

### ◇ 북극이슈포커스

### ◇ 국제회의이슈포커스

### ◇ 해외이슈포커스

### ◇ 극지정책이슈포커스

\* 로모노소프 해령 (Lomonosov Ridge)  
: 약 1,800km에 달하는 북극점 부근의 해저 산맥으로 덴마크, 러시아, 캐나다 연해와 가깝다.

\*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 대륙붕 한계를 200해리 이원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국가는 자국의 입장을 CLCS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CLCS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대륙붕 한계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판단을 내리되, 분쟁해결 권한은 없다.

## 북극이슈포커스

### 북극해 연안국의 로모노소프 해령 쟁탈전과 과학연구

-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는 로모노소프해령이 UN해양법협약상 자국의 대륙붕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함께 군사적 행동을 동반한 북극 쟁탈전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자국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하여 과학연구에 투자하고 있음.

### 오피니언

- 북극권 국가들은 천연자원의 보고인 북극의 정치적 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연구에 투자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북극 관련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과학기술의 발전, 민간의 국제협력에 더하여 북극권 국가간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함.

### 본문

-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Foreign Policy'가 로모노소프해령\*을 둘러싼 북극해 연안국의 각축전이 소개되면서, 약 100억톤 규모의 광물자원을 보유한 이 해령의 가치가 새삼 주목받고 있음
- 러시아는 '01년 로모노소프해령에 대한 대륙붕 인정요청이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로부터 기각당하자, '07년 북극수심 4,000m아래 해저에 티타늄으로 만든 국기를 꽂은바 있고, 캐나다도 '06년 하퍼 총리 취임과 함께 '북극주권회복'이라는 명제 아래 북극해를 주요 국정목표에 포함시킨 바있으며, 덴마크 역시 '14년 CLCS에 북극과 주변해역에 대한 대륙붕 확장 주장을 제기한바 있음
- 연안국간의 북극해 및 해저 쟁탈전은 러시아의 북극군사기지 건설 및 군사훈련과 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대응, 미국 핵잠수함 코네티컷호의 북극해 훈련, 노르웨이 군사령부의 북방이전 등 군사적 행동으로 비화되고 있음
- 로모노소프해령을 둘러싼 연안국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열쇠는 UN해양법협약에 있는데, 동 협약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확보를 위해서는 자국 대륙붕의 연장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음.
- 실제로 러-캐-덴 3국은 로모노소프해령이 자국 대륙붕의 연장임을 밝히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때로는 캐-덴 로모노소프해령연구 (LORITA-1), 캐-러 로모노소프해령지도 제작 등과 같이 국제공동 과학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함.



## Contents

◇ 북극이슈포커스

◇ 국제회의이슈포커스

◇ 해외이슈포커스

◇ 극지정책이슈포커스

## 국제회의포커스

### 북극이사회(AC) 제 9차 장관급회의(Minsterial Meeting) 개최

- 북극이사회는 2015년 4월 24일, 캐나다 이퀄루트에서 제9차 장관급회의가 개최하고 이퀄루트선언문(Iqaluit Declaration) 채택

### 오피니언

- 북극이사회는 이번 이퀄루트 선언문에서 옹저버 국가에 △블랙카본 및 메탄 배출 감소조치 관련 전문가 활동 △북극 철새종 개체 건강 및 서식처 보호 △오염원/방사능 물질 모니터링·평가 등에 참여 및 기여를 공식 요청함.

### 본문

- 이번 회의는 의장국 임기(2년) 종료시점마다 개최되는 장관회의로, 의장국 캐나다가 누나부트 준주 이퀄루트에서 개최됨. 동 회의에서는 북극권 주요 8개국 장관이 모두 서명한 이퀄루트 선언문이 채택 했음
- 동 선언문은 △지속가능한 북극 커뮤니티, △북극 환경보호, △북극이사회 강화라는 3개 주제로 52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사안에 대해 결정(Decision), 요청(request, instruct) 등을 지시하고 있음.
- 먼저 '북극 환경보호'에서는 블랙카본/메탄 배출감소 프레임워크에 대한 실행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옹저버의 본 활동 참여 요청, 오염물질/방사능 물질 트렌드, 건강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 지속 요청, 북극 철새종 보호 참여 등에 옹저버 국가에 직접적인 활동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함.
- 둘째 '지속가능한 북극커뮤니티'에서는 원주민 통신인프라, 공중 보건,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성, 전통지식, 성평등, 순록목축, 안보 증진, 특별히 원주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북극경제이사회 출범 등을 강조함.
- 셋째 '북극이사회 강화'에서는 북극원주민 사무국을 이사회 사무국이 위치한 트롬소 사무국 내로 이전하고, 옹저버와 북극이사회 간 관계(Engagement) 재정립 등을 추진키로 함.
- 이번에 몽골, 그리스, 스위스, 터키 및 EU가 옹저버 가입을 신청했으나, 회의시간의 제약성 등을 이유로 심의를 하지 않아 다음 장관급회의로 연기 되었음
- 이번 장관회의에서 미국은 북극기본계획(2013년)을 발표하고, 의장국으로서 북극이사회의 홈페이지 개설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북극이사회와 미국의 북극정책을 연계하여 세밀한 관찰이 필요함**

May  
Polar News Letter 2015

## Contents

◇ 북극이슈포커스

◇ 국제회의이슈포커스

◇ 해외이슈포커스

◇ 극지정책이슈포커스

## 해외이슈포커스

### 셸(Shell),미 알래스카 연안 Chukchi 해 석유시추 관련 미 내무부 승인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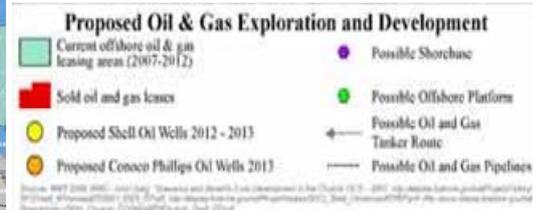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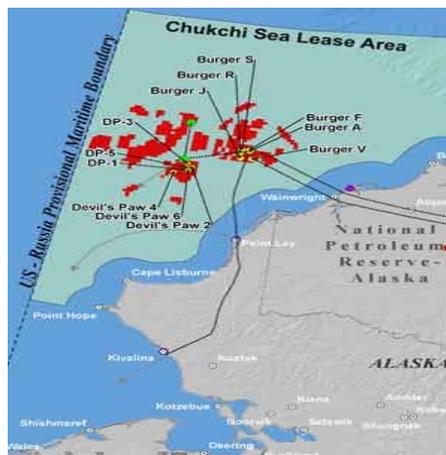
- 올 여름부터 알래스카 북서쪽 연안 등 최대 6곳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가능(자료 : 블룸버그, Financial Post)

### 오피니언

- 저유가 시대에 대부분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는 대비되나, 셸의 장기적인 수익구조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본문

- 2012년 말 셸은 북극해 시추 시험 과정에서 원유 유출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 차단돔이 훼손되면서 시추 계획(Kulluk drill rig)이 연기된 바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멕시코만에서 BP의 원유유출 이후 대서양과 북극해 석유 개발 승인을 미뤄왔지만 **환경오염 방지 등 안전장치를 강화해 오면서** 올해 들어 계속 시추 및 개발 승인을 내주고 있음
- 미 내무부는 지난 1월 해상시추와 관련하여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주 등의 연안을 검토한다고 밝힌바 있으나,
- 당시 Beaufort해 , Chukchi 해 등은 북극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시추 허용 검토 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이러한 추세로 Mackenzie Delta 지역을 따라 이들 북극해 개발이 본격화되면 12억 배럴의 석유와 10.4 Tcf\*의 가스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
- \* Tcf(Trillion cubic feet) : 천연가스 매장량을 나타내는 부피단위
- 이번 승인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됨



## Contents

◇ 북극이슈포커스

◇ 국제회의이슈포커스

◇ 해외이슈포커스

◇ 극지정책이슈포커스

## 극지정책이슈포커스

###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 혁신방안」 발표

- 미래부는 5.13(수),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연구 개발 혁신방안' 발표
-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과제수수(PBS) 비중 축소,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강화(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정책원 설립)등이 있음

### 오피니언

- 정부과제수수(PBS) 비중 축소, 행정부담 완화 방안 등은 출연(연) 연구자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됨. 그러나 정부 R&D 컨트롤타워기능 강화에 따른 자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연구 기획단계에서부터 극지연구 당위성 강화를 통한 자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됨

### 본문

#### •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 추진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 산업계 비중 확대 및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설치
- 출연연의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정부과제수수(PBS) 비중 축소

#### •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 확대
-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 폐지 및 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 확대 등으로 행정부담 완화

#### • 정부 R&D 컨트롤타워기능 강화

- (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 및 '과학기술정책원'(KISTEP+STEPI+KISTI 일부) 설립
- 중장기적으로 부처별로 분산된 R&D 전문관리기관의 효율적 개편 추진
- 중장기 R&D 투자전략 마련 및 이에 따른 자원배분 추진

#### • 향후 추진계획

- 5월 중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점검단을 구성·운영

#### • KOPRI의 대응 방향

- PBS 축소, 행정부담 완화 조치의 적극 수용 및 연구 기획단계에서부터 극지연구의 당위성을 강화하여 자원확보의 수월성 확보 노력 필요